

흔적조차 없는 광주학생운동 사적지

“광주시와 정부가 발상지 관리에 소홀”

보훈처 지원 계획있지만, 구체적 복원 방안없어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학생독립운동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화하기 위해 사적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0년 전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일제에 맞선 시위와 투쟁이 일어났다. 도심 곳곳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역사 현장 대부분이 ‘타’만 남겨져 빌딩이나 공원이 들어서 사적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가 지정한 사적지는 광주학생운동 시위지인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고등보통학교, 옛 광주역터, 광주 토교 터, 옛 광주농업학교 터, 옛 나주역사, 광주학생운동 준비지인 전남사범학교 터, 김기원 문방구점 터 등 총 8곳이다.

이중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이 일어났던 광주역과 운동 참여자들의 학교였던 광주고보, 광주농고, 전남사범학교, 그리고 학생독립운동을 지도한 시민사회단체가 자리 잡았던 흥학관 등의 건물은 모두 사라졌다. 흥학관은 3·1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위지인 광주역에 현재 광주 동부소방서가 들어서있다.

운동 당시 청년운동가들의 모임터였고 광주 항일운동의 본산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현재 광산동 66번지라고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다.

옛 광주역은 1929년 11월 3일 한

일 학생 간의 대규모 집단 충돌이 일어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역사적인 곳이다. 현재는 동부소방서가 들어섰고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정이다.

여수해수청 여수·광양

해상안전 특별단속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현호)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수청은 특별단속기간에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이 빈번한 항로·방파제 입구에서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고 항행 방법을 지도하게 된다.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는 항만순찰선 3척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할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나흘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인양되는 소방 헬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추락 나흘째인 3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여수 해상에서 해안경찰청, 해군 등 수색당국이 청해전함을 활용해 추락 소방 헬기 동체인양을 하고 있다.

전남 올해 교통사고는 ‘늘고’ 사망자는 ‘줄고’

10월까지 235명 사망
지난해보다 15% 감소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 줄었다.

사망사고는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5명이 줄어든 62명, 노인 사망자는 4명이 감소한 139명이다.

하지만 음주 사망자는 지난해와 똑같은 18명으로 특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전 불이행이었다. 특히 지난 2월 영산호 부근 1명과 5월 진도 3명, 8월

순천 3명의 사망사고는 모두 20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안전 시설 확충, 교통 안전의식 개선 등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전화 062)228-6000 팩스 062-222-5547

전남 완도서 양식 작업 중 40대 남성 숨져

2일 오후 12시45분쯤 전남 완도군 보길도 인근 미역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A씨(45)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당시 어선 위에서 같이 작업하던 아내가 인근 낚시배에 도움을 요청, 즉시 완도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은 신고접수 23분만에 현장에 경비정과 구조정을 급파, A씨 등 3명을 이목항으로 긴급 이송했다.

환자는 인근 보건소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 찬양글 게시 50대 2심도 징유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을 보면 북한의 3부자 및 그들의 과거 행적, 영도력을 찬양 미화한 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활활’ 여수 아파트 불타...주민 수십명 대피

2일 오전 6시 27분쯤 전남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 A씨(37·여)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4분만에 진화됐지만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집 내부 66㎡가 모두 탔다. 아파트 주민 수십명도 화재로 인해 긴급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금품수수 언론인 2심도 징유1년

법원이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과 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52)와 배임증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경우 추징금 300만원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금원을 반환한 점,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적이 없는 점”이 있다”며 “반면 이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차된 차량서 화재...인근 마을회관까지

주차된 승합차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인근 마을회관까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13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25인승 승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승합차에서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 등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